

이장로

본회 연구위원,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21세기 한국의 기업정책의 과제 및 추진방향

## I. 서언

‘한보 비리’는 우리 사회의 총체적 타락과 부패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동시에 한 재벌 기업의 경영이 국가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증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불과 수년 전에도 ‘수서 비리’를 보았고,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어 수많은 인명을 빼앗아 간 사건을 목도했었다. 기업이 이 사회에 죄의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대리인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되는 지경에 까지 이르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여기서 우리는 기업은 왜 존재하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의 본래 목적은 무엇인가?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왔던 기업의 목적은 경제적 이윤 추구라고 할 수 있다. 이익은 정상적으로는 양질의 서비스와 제품에 대한 경제적 보답이다. 이익이 없다면 위험을 감수한 소유주와 투자자에게 수익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미래의 성장을 위해 투자할 자원을 갖지

도 못할 것이다. 이익이 없이는 기업은 살아 남을 수 없다.

동시에 기업은 사회적 정당성을 상실할 경우 살아남을 수 없다. 국가사회는 그 필요에 따라 기업에게 자원을 위탁하고 그에 상응하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사회의 자원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사회전체의 행복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적을 갖는다.

정부의 기업정책 수립에 있어서 기업과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정책과제와 그 추진방향은 다르리라고 생각한다. 여기서는 기업과 사회는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개방시스템으로 보려고 한다. 기업은 하부시스템으로서 전체 시스템인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사회환경과 균형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기업정책 과제도 기업과 사회와의 관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부터 도출하려고 한다. '바람직한'이라는 말은 본래 가치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여기에 도출된 과제들은 일반의 상식수준에 비추어서도 벗어나지 않는 것들만 다루려고 한다. 그 과제들은 크게 네 가지, 즉 기업의 사회적 정당성 확보, 대기업집단의 소유 및 지배집중의 완화,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그리고 공동체적 기업윤리의 확보이다. 이하에서는 정책과제 각각에 대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고 그 추진방향을 논하려고 한다.

## II. 기업정책의 주요과제 및 추진방향

### 1. 기업의 사회적 정당성 제고

기업은 다른 모든 사회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일부분이며, 기업의 활동이 사회의 기대에 합치할 때 비로소 기업의 정당성이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것이다. 기업에 대한 사회의 기대는 단순히 경제적 기대 뿐만이 아니라 법률적, 윤리적 및 재량적 기대까지도 포함된다. 산업화가 진전되면

서 경제적 기대에 비해 경제외적 기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경향이 있다. 한국에서도 산업화와 사회 전반의 민주화 진전으로 국민들은 기업도 시민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법률을 준수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법률적 차원을 넘어 사회윤리 및 국민정서에 부응하는 기업행동을 희망하고 있다.<sup>1)</sup>

그러나 국민들은 김영삼 정부의 개혁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권력형 비리에 연루되어 사법처리되는 것을 보았고, 금융특혜를 받은 대기업들의 부실경영으로 인한 피해를 체험하고 있으며, 고질적인 건설업계의 비리와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사고들을 목도하였고, 환경파괴와 공해를 유발하는 부도덕한 기업들과 이를 단속하지 못하는 무력한 공무원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문제들이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없기에 국민들은 좌절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인다.

이와 같이 탈법적인 대기업집단의 행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반인 기업의 정당성에 큰 상처를 주고 있다. 국민들은 많은 대기업집단들이 정경유착에 의해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해 왔다고 생각하고, 정당한 기업활동에 의한 부의 축적마저 의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이런 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기업활동에 마지 못해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가치관의 혼란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신성한 노동의 가치에 대한 상실감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 만일 대기업집단이 사회에 불의와 부패를 확산시키는 대리인으로 국민들에게 비취진다면 이것은 한국 기업 전체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해치는 중대한 문제인 것이다.

국민들은 기업인도 일반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기업들이 법을 지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많은 기업인들은 '법대로 기업하면 망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탈법적인 기업활동을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공무원 또한 '경제살리기'라는 미명 아래 탈법을 묵인하고 때로는 이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도 한다.

1) 신유근, 현대기업과 사회, 경문사, 1995. 제3장.

참고로 국제투명성협회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부패정도에 대한 각국 기업인의 인식은 97년도의 경우 세계 52개 주요국가 중에서 34위를 차지해 지난해 27위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sup>1)</sup>

그러므로 정부는 무엇보다도 정경유착에 의한 권력형 부패를 근절시키는 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OECD의 부패라운드 협상과도 연결되어 있는 시급한 문제이다. 시민단체들이 제안한 부패방지법과 부정방지대책위원회가 제안한 공직자윤리법을 제정 혹은 개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하겠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관련 규제를 과감히 혁파함으로써 공무원이 권한을 오·남용하거나 기업과 결탁할 수 있는 여지를 줄여나가는 것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 또한 기업들의 탈법적 관행을 시정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현실적인 보완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유통업계에 만연되어 있는 무자료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행 부가가치세제도의 개선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sup>2)</sup> 무엇보다도 기업에게도 현행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여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대기업집단의 소유 및 지배 집중 완화

97년 4월 우리나라 30대 그룹의 경우 지배주주의 계열사 지분을 포함한 내부지분율은 43%로 거대기업집단을 사실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소유집중은 기업간 주식상호보유(상호출자)라는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즉, 지배주주 개인은 중핵기업의 지분을 10% 정도 소유하고, 중핵기업이 계열사에 출자한 지분을 이용하여 대주주 1인이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30대 그룹의 자기 자본 비율이 20% 정도이며,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10% 미만이므로 대주주는 자산의 5%를 소유하면서 거대기업집단을 완전히 지배하고

1) 한국경제신문, 97년 8월 1일, 8면.

2) 자세한 것은 대한상공회의소, 유통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1997. 8. 29) 참조.

있다.<sup>1)</sup>

현 정부는 대기업집단의 소유 및 지배집중의 결과 대주주의 경영 전횡, 족벌경영, 차입위주경영 등의 문제점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sup>2)</sup> 대주주의 경영전횡 문제는 대기업집단이 상법에도 없는 그룹회장제를 두고 그룹기획실을 통하여 중앙집권적 경영체제를 구축하여 불공정 경쟁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대주주가 이사와 감사를 사실상 임명하여 소유경영자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으므로 일반주주의 권익이 침해되고, 그룹의 경영실적 등 재무상태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경영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족벌경영의 문제란 기업규모가 거대화되고 활동이 고도로 전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권이 경영능력과 관계없이 대부분 2세에게 세습되는데, 경영능력이 부족한 2세가 경영권을 인수할 경우 경영부실을 낳고 국민경제 전체에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대주주 일가를 중심으로 한 경영으로 정치사회 민주화에 역행한다는 일반인의 부정적인 인식이다.

차입위주경영의 문제란 대기업집단의 과다차입으로 중소기업과 가계는 금융기관에서 자금차입이 곤란하고, 대기업의 자기자본비율이 외국에 비해 크게 취약하여 경기순환시 도산의 위험에 노출되며 국민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초래하고, 부채비율이 높기 때문에 금융비용이 많아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대기업은 실세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아 지대(rent)를 추구하며 타인자본으로 사업을 확장하여 경제력집중이 심화되고, 차입을 위해 계열사간에 금융기관 채무를 보증하여 대기업에 금융편중 및 부실계열사의 퇴출을 지연시킨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대기업집단의 소유집중은 부의 집중을 가져와 분배적 형평이 저해되고, 행정력과 결부되면 소위 정경유착을 유발하게 되고, 이를 방지할 경우 소득계층간의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분극화를 초래하여 자본주의

1) 전국경제인연합회, 대기업정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997.

2) *ibid.*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sup>1)</sup>

위와 같은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 정부는 대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 억제정책과 아울러 지배구조개선에 중점을 두고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대기업집단의 반발이 크다. 기업투명성 제고 방안은 상장기업과 지배주주간의 거래내역 공시 강화, 기업자산의 임의 운용 및 처분의 금지, 감사기능의 강화, 소주주 권한의 강화 등을 포함하여 장기적으로 사외이사제도, 사외감사제도, 그리고 누적 투표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기업의 투명성 제고는 정부가 기업의 자율적인 투명성 강화 노력을 지원하고, 오히려 투명한 경영을 현실적으로 어렵게 하는 규제, 행정제도, 정치 사회구조, 준조세 등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나 제도 등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현행제도의 내실있는 운용에 역점을 두어야한다고 주장한다.<sup>2)</sup>

정부와 대기업 사이에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집단의 소유 및 지배집중은 완화되어야 하고 이것은 본래 다차원적인 문제이므로 그 대책 또한 종합적이어야 할 것이다.

소유집중의 완화는 원칙적으로 기업소유의 직접분산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정부는 기업공개 시책을 좀더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기업집단의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출자한도 및 채무보증한도를 계속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2세로의 부의 세습 및 족벌경영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속세율을 대폭적으로 인상하고 상속과정에서의 편법이 통하지 않도록 세정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지배구조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그룹 회장의 임원등기를 의무화하여 경영활동에 책임을 지도록 하고, 경영의사결정에서의 근로자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시제도 및 감사기능의 강화,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 실질적인 사외이사제도 도입 등 기업

1) 이규익, 이재형, 기업집단과 경제력집중, 한국개발연구원, 1990.

2)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투명성 제고정책에 관한 검토, 금융정책실 조사 96-2, 1996. 6.

투명성 제고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리고 대기업집단의 소유 및 지배집중 완화를 위해서는 자본 노동 상품 금융시장 등 시장여건이 개선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자본시장에서 기업의 진입 및 퇴출장벽이 제거되어 기업집단간 경쟁이 촉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관치 금융이 사라져 금융자율화가 이루어지고 금융시장이 개방되면 대기업집단의 차입위주경영 및 재무구조 문제는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 3.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WTO의 출범에 따른 무국경세계(borderless world)의 도래로 기업활동에서 국경이 더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각국 정부의 무역장벽이 축소되어 자유무역이 확대되는 한편 사회주의국가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민영화추진으로 시장이 개방되면서 전세계시장은 기업들의 경쟁터로 변하고 있다. 기존 국내시장을 잃지 않으려는 기업과 새로이 개방되는 시장을 차지하려는 외국기업들간의 사업영토 확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세계시장 점유율은 곧 그 기업 또는 국가의 국제영토라 할 수 있고, 영토를 많이 차지할수록 규모의 경제, 상호지원 및 상승효과, 세계적 이미지 제고 등 여러 면에서 이점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sup>1)</sup>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의 국제경쟁력은 그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국가의 경쟁력을 토대로 하여 기술 등 기업특유의 자원과 이를 다수국가 시장에 어떻게 이전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국제이전능력에 달려있다. 따라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 강화, 기업의 기술개발추진, 그리고 기업활동의 세계적 확대 지원이라는 세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고비용구조를 개선하고, 우리나라 소비자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합리적 소비행동을 촉진하며, 경쟁적 시장구조

1) 이장로, 국제마케팅, 개정판, 1997. 제2장-3장.

를 조성하고, 부품 및 자본재 산업의 경쟁력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이 자본재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시책이 요구된다.

중소기업정책은 업종다양화와 전문화추세에 맞추어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차별적인 시책이 바람직하다. 대기업과 동반성장이 가능한 기업군, 미래첨단정보화를 선도하는 기업군, 다품종소량생산체제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기업군 등으로 분류하여 그 특성에 맞게 지원하는 한편, 기업의 성장단계별로는 창업단계에서는 투자위주의 지원제도로 개선하고 기술개발에는 장기저리의 자금지원, 유통판매단계에서는 업계의 자율적인 공동화사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벤처기업의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소기업이 첨단산업관련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시스템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재원의 확충을 위해서 예산 비중을 높이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능을 활용하여 신용사업 및 신용보증업무를 취급토록 하는 방안과 중소기업전담 금융기관의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sup>1)</sup>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취약한 기초과학 및 생산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정부에서는 장기적인 과학기술 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기술개발투자를 더욱 확대하는 동시에 민간부문이 기술개발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또한 기술개발투자 및 연구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산학연 협동연구체제를 활성화하고 선진 신기술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선진기술의 습득과 효과적인 기술개발을 위해 연구기술활동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개발된 기술의 보호 및 활용을 위해서 지원제도를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2)</sup>

기업활동의 세계적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외시장을 확대하고, 진

1)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중소기업 활력회복을 위한 긴급대책," 97. 4. 2. 간담회자료

2) 한국산업은행, 2000년대 한국산업의 구조변화와 장기발전전략, 1995. 10. P. 179



입방법을 다각화하고, 국제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외시장의 확대는 기존 해외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이고 신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방안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어느 경우든 현지 마케팅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정부는 기업의 해외시장 확대를 위한 현지 마케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KOTRA를 일본의 JETRO에 버금가는 조직으로 확충하여 기업들에게 해외시장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미국처럼 해외공관의 상무기능을 강화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하겠다. 그리고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 따르는 위험과 비용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특히 그 기업으로 인해 한국 상품의 이미지가 상승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과감히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관련 지원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외협력기금을 확대하되 이 자금은 시장잠재력이 크고 효용성이 높은 국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투자자금의 지원을 확대한다. 그리고 정부는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 방지협정의 체결을 확대하여 기업의 해외진출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국가간 정치, 경제 및 문화교류를 확대하고 외교에 있어서도 마케팅개념을 도입하여 국가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주재원과 교포사업가의 신분보장도 필요하다.

#### 4. 공동체적 기업윤리의 확립

1991년 1월 전경련에서는 비자금과 정경유착으로 인하여 실추된 대기업의 이미지를 바꾸어 보려는 의도에서 기업윤리헌장을 제정하고 8개항으로 구성된 실천강령을 발표한 적이 있다. 이에에는 기업의 사회적책임 완수, 정당한 이윤창출, 공정경쟁, 중소기업과의 협력강화, 고객의 권익강화, 기업구성원의 이익향상, 환경친화적 경영, 지역사회 발전기여 등 기업이 추구해야 할 윤리규범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헌장은 발표에 그치고 말았다는 것을 그 이후 대기업들의 행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어떤 기업도 진공 상태에서 존재할 수는 없다. 기업체는 그 사회로부터 종업원, 경찰과 화재 보호, 안정된 정부 등을 필요로 한다. 기업은 물과 공기 그리고 만인의 소유물인 천연자원을 사용한다. 모든 기업은 그 사회의 자원을 관리하는 훌륭한 청지기이자 좋은 이웃이다. 달리 말하면 기업에는 많은 이웃이 있고, 그들이 기업에게 요구하는 것은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기업은 근로자, 소비자, 공급자, 주주, 지역사회, 환경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조화시켜 사회전체의 이익을 증대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바람직한 이해관계자 관계정립을 위해서는 기업과 이해관계자가 지향하는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sup>1)</sup> 먼저 기업과 근로자와의 관계에서는 산업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민주주의란 기업은 근로자의 권리신장과 근로복지의 확대를 피하고 근로자는 주체적 존재로서 자발적이고 협조적인 자세로 기업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기업을 성장 발전시키려는 이념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 기업은 근로자의 권리신장과 노동의 인간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근로자는 스스로 협동적 참여의지를 확립하며, 기업과 근로자 양측의 노력은 기업경쟁력의 제고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기업과 소비자관계에서는 소비자주의를 지향하여 기업은 소비자주권을 확립하고, 소비자는 사회적으로 건전한 수요를 창출하며, 기업과 소비자 모두 소비생활의 질을 향상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산업공생주의를 지향하여 대기업은 공정거래의 실천에 노력하고, 중소기업은 전실한 협업기반구축에 힘쓰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가 산업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과 일반주주와의 관계는 기업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주주권익의 보호, 안정적 자본의 공급, 기업가치의 증대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사회와는 지역사회복지주의를 목표로 박애주의정신과 지역공동체주의를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

---

1) 신유근, op cit. 제8장.

하고, 생태적환경과는 환경보호주의를 지향하여 녹색경영의 실천의지를 확립하고 자연-인간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sup>1)</sup>

위와 같은 공동체적 기업윤리는 우리나라와 같이 시장기능이 불완전할 수록 그리고 시장력의 분포가 불균등할수록 더 큰 중요성을 갖게 된다. 따라서 대기업집단은 일반 경제주체에 기대되는 수준 이상의 기업윤리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도록 요구되는 것이다.<sup>2)</sup> 정부는 공동체적 기업윤리가 확립될 수 있도록 기업의 윤리적 경영과 사회적 책임수행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증대시키는 동시에 기업체가 출연 설립한 공익재단에의 입출금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여 탈세의 여지를 없애는 제도를 병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회단체와 협력하여 기업 윤리 확립에 대해 사회적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 III. 결론

성경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사명은 하나님의 창조파트너로서 가치를 창출하여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며,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킴으로써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은 하부시스템으로써 전체시스템인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사회의 다른 시스템들과도 균형적인 관계를 이룰 때에 생존과 발전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특히 대기업집단들은 소유 집중 및 지배집중을 완화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공동체적 기업윤리를 확립하는데 자율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일차적으로 기업의 이와 같은 자율적인 행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

1) *ibid.*

2) 이규억, 이재형. *op cit.*, 121-122.

을 조성하는 방향에서 기업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규제를 혁파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기업정의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더불어 사는 좋은 사회를 위해서 공동체적 기업윤리의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영자에게 청지기정신을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경영자는 사회의 자원을 한시적으로 관리하는 청지기이므로 사회전체의 공동선을 이루는 충성스런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새롭게 개발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고객과 종업원, 지역사회, 정부, 그리고 환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기업이 세계적으로 탁월한 기업이 될 수 있다. 경영과정에서 정의가 구현되고 전체사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기업의 단기적 이익을 희생하는 성숙한 기업,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탁월한 기업이다.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 땅위에 진정한 평화의 공동체가 형성되기를 바란다. 노동자와 사용자, 기업과 소비자, 사람과 환경, 모든 생명체가 서로 믿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란다. 한국의 기업들이 지구상의 모든 이들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나누고 세계에 믿음을 주고 사랑을 받으며 소망을 안겨주는 탁월한 기업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은 성경적 기업윤리의 회복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본다. 88